

2025 국정감사

‘10·15 부동산 대책’ 난타전… 野 “부동산 4인방 사퇴하라”

與野,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서 갈등
정책 당국자 겹투자 의혹 지적
국토부 대변인 대기발령도 ‘도마 위’

국토교통부 종합감사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 난타전으로 열렸다. 이상경 국토부 전 차관의 사퇴에도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정책을 주관한 부동산 ‘4인방’에 대한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적 요소라든가 실소유와 거리감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심”이라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열린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광범위하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소위 ‘갭투자’는 전면 금지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관련 부처의 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책 당국자들은 정작 겹투자로 집을 마련하고, 고가 주택을 대출로 사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총자산 중에 주택이 최대”라며 “사다리를 걸어차신 분들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불리고, 일반 국민들은 주거수단이라고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껍 속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갭투자 등 논란이 불거진 ‘4인방’에 대한 사퇴 촉구도 이어졌다. 김용범 대

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덕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에 책임이 있는 4인방이 사퇴해야 한다”며 “대출 규제 주도하고 자기 집값 4억 올린 금감원장이나, 재건축 입주권 사고 실거주 안 한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구윤철 부총리는 경매로, 이덕원 금융위원장 겹투자로, 적어도 이 4인방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국토위 차원에서 의

결하고 회의 진행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4인방에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까지 더해 ‘부동산 오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값 떨어질 것이라고 했으니 지금 비쌀 때 팔고 집값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라”며 “대통령 그리고 정책 입안자, 대통령 참모진들 당장 집 팔라고 건의하겠나”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상경 국토부 전 차관의 사퇴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국토부 대변인에 대한 대기 발령 인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했던 발언과 ‘갭투자’로 임명 났던 만에 물러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는 차관이 쳤는데 왜 대변인이 대기 발령이 되나. 이유를 알아보니 공보 대응을 못했다고 하는데 공보 자체가 안되는 말

을 해놓고 공무원에 책임을 지게하는 게 비겁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 역시 “어떤 경과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장관이 먼저 제안한 것인지, 대통령실로부터의 인사 조치 요구가 있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차관) 원래 기자 브리핑룸에서 질의 응답을 받으면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유튜브 채널로 일방적으로 하게 됐다”며 “그런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있어서 대변인에 대한 대기 발령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인사 조치에 대해서 사적인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국토부 1차관이 사과를 발표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답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이창용 “올해 연간 성장률 1% 이상 될 가능성 커”

〈한국은행 총재〉

4분기 지켜봐야… 美 관세협상 변수
1% 넘더라도 구조개혁은 필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본유출 우려
은행 중심·단계 도입 원칙 제시



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창용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1%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3분기에 (전기 대비) 1.1% 성장할 줄 알았는데 1.2% 성장했다. 소비쿠폰의 효과도 있었고, 수출도 좋았다”며 3분기 실질 성장률을 근거로 들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올해 성장률에 대해 ‘1% 이상’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내놨다. 동시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동산, 노동시간 이슈를 한 번에 묶어 “속도보다 안정과 규칙”을 강조했다. 그는 “자본유출·환율 변동성, 주택공급의 질, 노동·임금·생산성의 균형을 제

다만 “4분기는 지켜봐야 한다. 미국 관세 협상에 따라 경제 상황이 변할 수

있고, 1%를 넘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 낮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수치 개선을 인정하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디지털자산과 관련해선 한층 직접적이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도입할 경우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며 “많은 사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져나갈 것 같아, 저는 사실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해보고 외환이 나가는 게 잘 컨트롤되면 그

음에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행 중심·단계 도입”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고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 것 같지는 않다”는 점도 짚었다. 외환·자본 흐름을 고려한 롤메이킹(준비자산·상환규칙·외환규제 연계) 없이는 오히려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

부동산 해법은 ‘공급의 전환’에 방점이 찍혔다. 이 총재는 “서울 오피스(사무실) 공급안을 주택으로 바꿔 획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오피스→주택 전환 카드를 제안했다. 그는

“AI 확산 등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고 있다”는 구조 변화를 근거로 들었다.

동시에 “부동산 문제는 정책 한두 개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장기·일관 패키지 접근을 주문했다. 단기 처방이 아닌, 수요·공급·세제·인프라를 함께 보완하는 ‘규칙의 설계’가 핵심이란 취지다.

노동 이슈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정치권 일각의 주 4.5일제 논의에 대해 “장단점을 고려해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했다. 임금·생산성·노동공급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보완책부터 설계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통화정책이 ‘물가·성장’만이 아니라 노동시장과의 정합성을 요구받는 국면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대목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野, 최민희 ‘갑질의혹’ 공세… 與 을지로위원회에 신고 시도

〈국회 과방위원장〉

신고서 제출했으나 접수 안 받아
野 과방위원, 최 위원장 사퇴 촉구

국민의힘이 29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의 과방위 행정실 직원 ‘갑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신고를 시도했다. 아울러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최민희 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전날(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국회 과방위원장이자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망각하고, 화환 갑질·보도 갑질·직원 갑질 등 이른바 ‘3갑질’을 일삼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내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을(乙)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며 내세운 상설위원회로, 사회 전반의 갑질관계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디어특위는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최민희 위원장의 팔걸이 포식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버튼이 포함된 ‘축의금 장사’ 논란을 자초한 데 이어, 결혼식장에는 피감기관이 보낸 화환을 포함해 100여 개의 화환이 진열돼 있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며 권력형 화환 갑질 논란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최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100만 원’, ‘900만 원 입금 완료’ 등 구체적 금액이 오가는 장면이 확인됐다”면서 “대기업·방송사·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일반 상식을 벗어난 고액 축

의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호철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이준우 미디어대변인 등은 이날 국회 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실을 찾아가 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서류 접수를 받지 않았다고 특위는 전했다.

한편, 야당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과방위원들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일방적인 운영방식 외에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축의금 파문과 일방적 보도행위 등 이런 형태로는 과방위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최 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정치권 대표, ‘10·29 추모’ 위해 한자리에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
우원식, 정청래, 장동혁 등 참여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대표들이 29일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한 자리에 모여 159명의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대형 인명사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이재명 정부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3주기 추모행사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을 열었다. 정부가 유가족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추모 행사를 공식적으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억식에 우원식 국회의장·김민석 국무총리·오세훈 서울시장·정청래 민

주당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관계자와 유가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9분엔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이렌이 1분간 울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즐거워야 할 축제의 현장이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날의 참상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국가가 책임 지겠다.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히 앓던 사고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하나 하나 바로 잡아가겠다”면서 “다시는 국가 방임과 부재로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